소수 존중하고 약자 배려하는 5월정신 지킴이

〈목 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④ 광주인권운동센터

2009 광주인권영화제 기간 중 열린 영화 '개청춘'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작한 감독과 관객의 대화 장면.

"5·18 민중항쟁이 광주의 민주·인권운동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민주·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성·노인·장애인·이주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되레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을 개인적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단체나 정치인 등 여러 부류들은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라고 자평하며,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는 아직 민주·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광주는 민주·인권도시이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항쟁의 주역이 희생을 통해 민주·인권의 가치를 증명해줬다면 후세는 이를 실현하는데 '너와 나' 구분없이 '우리가 된 모습'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광주인권운동센터 회원들의 토론 중 일부다.

광주인권운동센터는 광주의 민주·인권운동을 주도해온 비영리 민간단체다. 광주인권운동센터의 지난 15년에는 과거 광주의 시대적 과제가, 그리고 민주·인권운동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광주인권센터는 6·10 항쟁(1987년)과 5·18 민중항쟁(1980년)을 경험한 세대를 주축으로 결성된 '인권지기'가 모태가 돼 1995년 회원 7명으로 출발했다.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개개인이 제 목소리를 내는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회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바로 이같이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 5·18 정신의 시작이고, 확장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인권지기는 설립 초기 양심수 석방과 비전향 장기수 법률지원 및 후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왔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 다른 인권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는가 하면 학생과 노동자, 재야인사 등 시국사범 법률지원은 물론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활동을 하는 등 민주화 및 인권 관련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해 왔다.

95년 7명으로 시작 다양한 인권운동

"광주, 민주·인권도시 갈 길 아직 멀어"

인권지기는 애초 양심수 석방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주력했으나 점차 단체의 역량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바라보게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광주인권운동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회원 수도 200명으로 늘었다. 노동·여성·장애인·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명칭을 바꾼 뒤 광주인권운동센터의 민주·인권정착을 위한 노력은 한층 무게를 더해 갔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해마다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주제로 한 광주인권영화제도 열었다. 이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청소년 인권학교, 인권 교육 및 시민강좌 등 인권활동가 육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를 민주·인권도시에 걸맞은 자리에 올려 놓겠다는 것이 이들의 소박한(?) 꿈이다.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무늬만 민주·인권도시 일 뿐, 인권·복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세울 점이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광주는 민주·인권도시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현 정부 들어 되레 민주·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주인권운동센터는 올해를 민주·인권운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한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된 5월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각종 민주·인권운동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45) 사무국장은 "우리는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민주·인권의 소중함을 맛봤다.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일정부분 일조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소외된 곳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30주년 전국적 기념행사 국민역량 결집 원동력 만들어야"

박 일 서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장

2010년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비롯한 역사적 의미가 깊은 10년 주기 보훈기념행사가 유난히 많다.

올해는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4월은 4·19혁명 50주년, 6월은 6·25전쟁 60주년, 8월은 경술국치 100년, 9월은 광복군 창군 70주년, 10월은 청산리 대첩 90주년 등이 예정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을 수 없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중앙기념식이 거행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숨길 수 없다.

다 아시다시피,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의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으로써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민주, 정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취해진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해 민주수호 궐기대회를 개최한 반독재 투쟁운동이 바로 5·18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통한의 아픔을 남긴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표상이 됐다. 또한, 광주는 명실상부한 민주화의 성지로 세계에 알려졌다.

정부는 1997년 5·18민중항쟁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주관으로 첫 행사를 치른 뒤, 2003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고 있다.

매년 기념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올해에도 5·18 관련단체 및 5·18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금남로 등 광주 일대 역사의 현장에서 정신계승과 문화예술행사, 교육행사, 시민참여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5월 한 달 내내 열려 5·18추모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며 전국 각지에서도 기념식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30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5·18을 다시금 삶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 생각보단 녹록지 않다.

이에따라 국가보훈처는 이제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5월단체의 통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중심에 당당히 서는 부강한 나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온 시민이 대동단결해 독재정권에 맞섰던 5월 정신은 국민역량 결집의 원동력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제 5·18민주화운동도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는 뜻의 이립(而立)을 맞았다.

5·18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와 광주를 넘어 전 세계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